

전북 백년대계 위해 '의기투합'

전북자치도·시군·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내년도 예산 확보 대응·주요 현안 발전 전략 등 논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 도내 시장·군수가 국가예산 확보와 시·군 현안 해결을 위해 한데 모여 뜻을 합쳤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8일 전북자치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 조배숙 국민의힘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정현을 시장 군수협의회장 등 14개 시장·군수들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전북특별자치도 백년대계를 위해 함께 뛰자고 입을 모았다.

김 지사는 먼저 민선 8기 2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2조8,000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기업유치, 아차간지 특화단지과 기회발전 특구 지정, 세계적인 비즈니스 대회 유치까지 모든 성과는 국회의원, 시·군이 같이 호흡하며 달려온 결과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다지고 '활기찬 전북, 행복찬 도민'을 만들기 위해 6대 목표 14개 중점과제를 세워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남은 2개월여의 기저부 예산편성 기간 동안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2025년 국가 예산 확보 여건은 세수여건 악화, 간접재정 기초 속에 기재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회의원·도·시·군이 함께 힘으로 함께 힘을 모아 전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

장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전북 도약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특별한 도전으로 지역발전을 현실화 시켜야 한다"라며 "국가예산 확보도 전북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각 상임위원회를 비롯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국민의힘 상임위원회 배정시 예산결산위원회 배정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며 "예산확보를 위해 여야가 같이 힘을 보태야 된다"고 말했다.

정현을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

협의회장은 "전북자치도 출범으로 새롭게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라며, "오늘 예산정책협의회가 도와 시·군, 정치권이 원팀으로 힘을 합쳐 차질 없는 예산확보를 위한 결의의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군에서는 KTX 익산역 확장 및 선상주차장 조성(익산), 등 48건의 안건에 대해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과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이만호 기자



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가 한 자리에 모여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마을기업 지원 체계화되나?

민주 한병도 의원, '마을기업 육성법' 대표발의 종합계획 수립·육성위원회 설치 등 대책 반영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 소득 향상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은 8일,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일확천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역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마을기업은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소멸 등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으로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모두 갖춰야 지정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남 209개소, 경기 208개소, 전북 120개소 등 전국에 총 1,800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2011년에 시작되었는데 5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70.8%에 달하며 상당한 수준의 영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마을기업 전체 매출액은 2011년 196억원에서 2023년 3,09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고, 기업당 매출액 또한

3,600만원에서 1억 7,200만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에서 1만 2,26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마을기업은, 정규직 채용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3,189명이 상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분류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과 달리, 마을기업은 근거 법령 없이 지원과 조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인 운영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이번 법을 제정안에서 마을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마을기업육성위원회 설치 △창년 마을기업 우대지원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마을기업지원센터 지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마을기업 육성을 도모했다.

향후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마을기업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발굴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방소멸 극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의원은 "지방소멸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지금,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경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며 "마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총망라한 본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익산=이재춘 기자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최고위원 출마 선언

"당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

조국혁신당 정도상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8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최고위원 출마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신이 조국 당대표에게 창당을 제안한 세 번째 인물이라며, 조국신당 창당발기인이 되어 전북도당을 창당하게 되었고, 지난 총선에서 전북도민들의 45%가 넘는 지지를 받아 감사하다며, 전국적으로 687만 4,278표를 얻어 24.25%의 득표율로 비례 12석의 원내 제3당이 되었다고 자라를 빌려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이 총선을 치르고 난 후 민주당에서 처음에는 원내 교섭단체를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여서 자신의 당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잠재적 경쟁자로 생각하는지 원내교섭단체 이야기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오는 20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위기에 맞서 싸워서 조국을 지키기로 했으며, 이것이 바로 자신이 최고위원에 출마하게 된 동기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87년 불완전하게 탄생한 6공화국을 버리고 7공화국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최고위원 출마와 관련 공약사항으로는 먼저, 시대정신의 스케일업으로 검찰 독재 조기종식,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은 물론이고 7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과정과 목표를 설계하고 그 목표에 도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를 통해 배출되는 수 조생들을 철저히 교육시켜 비록 무



조국혁신당 정도상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8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최고위원 출마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동기를 밝히고 있다.

"7공화국 가기 위한 과정·목표 설계 풀뿌리 당원과 소통 통해 중앙당 지원 조국 정치학교·주권당원 아카데미 개설"

소통을 통해 중앙당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과 학습의 스케일업으로 치열하게 학습하고 교육하며, 당원 배가에 노력해 지속 가능한 제1당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리고, 현재 '조국 정치학교' 개설을 위한 기초작업에 착수한 상태이며, 이 학교를 통해 배출되는 수 조생들을 철저히 교육시켜 비록 무

명일지라도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그리고 시·군 단체장과 도시사까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도록 하겠다며 인재발굴과 성장에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또한, '주권당원 아카데미'도 개설하여 당원이라면 의당 갖추어야 할 인문정신과 정무적 감각, 당의 진로와 목표를 분명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 학습에 힘쓰는 정당이 되

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국혁신당이 7공화국으로 가는 위대한 도전자, 위대한 정당인 되길 바라며, 조국을 지키고 조국의 동반자가 되어 전북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최고위원이 되길 바라며 출마했다고 희망에 부른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당대회는 오는 20일 열리며, 사전에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 전 당원이 투표해 2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게 되며, 득표율이 가장 높은 최고위원 후보자가 상임 최고위원이 되는 시스템을 갖췄다.

정도상 최고위원 후보자는 1960년 출생으로 장훈고와 전북대 목문학 학사과 전북대 국문학 석사 졸업 후 중앙대에서 현대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바 있고,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1987년 단편소설 '심오방아'로 문단에 데뷔했으며, 계림문화재단 남부동원문학사업회 부이사장,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6.15민주문학인 남부동원 집회 회장을 지내고 있다.

주요 수상경력으로는 2008년 제25회 요산 문학상과 2008년 제7회 아름다운 작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조국혁신당 창당 주요 멤버로 전북도당을 창당에 활발한 정당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국 대표와는 2012년부터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인연의 끈을 이어오고 있으며, 조국 대표가 어려울 때 작가 1,200여명의 지지 선언을 주도하는 등 조 대표와 정치적 궤를 함께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안호영 의원, 완주군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군)이 지난 5일 완주군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완주군청에서 진행된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안호영 의원과 유희태 완주군수, 유익식 완주군의회 의장, 윤수봉·권오안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안호영 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해,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의 현황과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안호영 의원은 △완주 시 승격 추진, △국제수소거대소 설립,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4개 주요 현안과 △수소 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 △완주군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등 7개 주요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을 비롯한 안건들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총선 완주를 '절단경제특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며,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수소특화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서 '완주군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완주 일반산업단지 완충지류시설 설치' 등 환경부 소관 사업 역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경기침체, 지방소멸 가속화 위기에 대응 완주군이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던 것은 안호영 의원을 비롯한 도·군원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며, "이번 협의회가 당·정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며, 완주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심도 있고 풍성한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성수 예결특위 위원장, 취임 축하화분 아름다운가게에 기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수(고창1) 위원장이 취임 축하화분을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에 기증했다.

김성수 의원은 8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 김진형 공동대표와 오현주 본부장에게 화분 40여 개를

전달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이번 기부로 나눔 문화 실천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작게나마 도민들에게 행복이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도민들의 행복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는 기증 받은 화분을 도내 6개 매장에서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소외계층에 기부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강인식 예결특위·오창숙 윤리특위 위원장 선출

남원시의회는 제267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과 윤리특별위원장을 선출했다. 예결 위원장에는 강인식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기열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내년 6월까지 풀이 유죄 의무 위반 사항과 의원의 자격 윤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남원=김기주 기자

남원시의회는 제267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과 윤리특별위원장을 선출했다. 예결 위원장에는 강인식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기열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내년 6월까지 풀이 유죄 의무 위반 사항과 의원의 자격 윤리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남원=김기주 기자

민주 정읍·고창지역위, 선출직 공직자 해당 행위·비위 의혹 조사 결정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9대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의 해당 행위와 전반기 내내 정읍 시에 돌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위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결정하기 위해 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회는 "선출직 공직자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고 국가의 세금으로 연봉을 받는 자로 보다 높은 청렴성, 공정성 및 도덕성과 윤리의식 그리고 책임감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9대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작에 앞서 9대 후반기 정읍시의회 의장단 선거에서의 해당 행위와 전반기에 벌어졌던 모든 의혹을 펼쳐내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열어 해당 행위와 비위 의혹 조사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제안 안건은 9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위해 의임총회에서 의결한 당론을 위반하여 투표한 의원들에 대한 해당 행위 여부 조사의 건이다. 정읍시의회 의원은 총 17명으로 이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인데, 7월 1일 정읍시의회 본투표에서 의장단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대해 의회에서 결정한 당론과 달리 이탈표가 드러나면서 해당 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제2안 안건은 전반기 2년 동안 의혹으로 떠돌았던 정읍시의회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의 건이다.

K 시의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P 시의원의 성희롱 관련 사항과 부인의 위장전입 및 농업 창업자금 부당 대출 혐의, L 시의원의 국민

권위원회가 징계 요청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불법 복제와 폐기물 매립 의혹, 동료 의원과 언론사 등 각종 고소 고발로 인한 당 윤리규범 위반, 22대 총선 관련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교사) 혐의, H 시의원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유죄판 결정문 관련 허위서류 작성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 등이 논란이 되어 왔다. K·P 시의원의 조사는 의장단 자격 검증위원의 조사가 선행돼 사실상 완료된 상태이며, L·H 시의원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역위 차원에서 조사가 본격화된다. /정읍=김대환 기자